

대법 판결까지 난 키코... 윤석헌의 금감원, 재조사할까

(KIKO)

업계추산 940개 기업·10조 피해

키코공대위, 조사단 구성 공문
금감원에 조만간 제출하기로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취임하고 본격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통화업선상품 '키코(KIKO) 사태'가 재조명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 추산 940여 곳의 기업들이 최대 10조원 가까운 피해를 입은 키코 사태를 놓고 과거 금융당국이 관련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의 손을 들어줘 묻히는 듯 했던 사건을 새 금융감독 수장이 꼬집어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키코피해기업들의 모임인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키코공대위)는 키코 사건 재조사를 위해 민관합동 조사단을 구성하자는 요청 공문을 조만간 금감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취임한 윤석헌 금감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꾸려진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당시인 지난해 12월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키코에 대해 "혁신위의 입장을 묻는다면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 "(판매주체였던)은행은 마치 약국이 환자에게 검증되지 않은 시약을 권한 것과 같다고 본다. 약사도 그 약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모르면서 손님이 어떻게 되는 말든 판매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키코 사기사건'에 대해 고발장을 다시 접수했다. /키코공대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혁신위는 키코 관련 민사소송을 놓고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내려진 터라 판단의 폭이 상당히 제한적인데다 내부 위원들끼리의 격론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당시 위원장은 "감독당국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혁신위의)보고서에 (키코)상품의 사기성에 관한 여러가지 해석을 제시한 것은 그만큼 (상품에)문제가 있다고 봤다는 의미"라면서 "복잡한 상품에 대해 고객에게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점 뿐만 아니

라, 이를 판매한 은행 조차 제대로 상품을 이해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원장의 이날 취임사에는 키코와 관련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다.

키코공대위 조봉구 위원장은 "전임 금감원장 시절에도 합동조사단 구성을 놓고 금감원 내부와 실무논의를 진행했지만 진척이 없었다"면서 "관련 전문가가 많고, 그동안 쌓아놓은 자료도 상당한 만큼 충분한 재조사를 통해 키코 사건의 진실이 재조명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키코 공대위는 키코 상품을 판매했던

씨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대구은행 등 7곳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지난 4일 재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SC제일은행 녹취록 등 추가로 확보한 증거물도 제출했다. 여기에는 해당 은행들이 키코 상품을 비용 부담이 없는 '제로 코스트'라고 속여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도 지난 3일 키코 피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금융 관련 지원방안에 대한 설

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정책 당국이 키코 피해기업들과 직접적인 대화에 나선 것은 꼭 10년만이다.

해외에선 법원이 피해기업의 손을 들어준 판결도 나왔다.

키코공대위에 따르면 인도 타밀나두주 코임바토르시 법원은 해당지역 의류회사인 'Free look Fashions'가 인도 ICIC BANK를 피고로 제기한 KIKO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인도 법원은 판결에서 2008년 당시 해당 은행이 판매한 키코 상품 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불법적이며, 인도중앙은행(RBI)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키코공대위 관계자는 "한국에선 2008년 키코에 가입한 기업들이 영문도 모른 채 출도산을 했는데 2013년 9월 당시 우리 대법원은 키코가 불공정계약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우리도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발장을 다시 접수하게 됐다"고 전했다.

수출기업들이 주로 가입한 키코는 Knock-In, Knock-Out의 영문 약자로,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 환율이 급등하면서 상당수가 피해를 봤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삼성바이오로직스 심병하 상무(왼쪽) 등이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분식회계 관련 논란에 적극 해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바이오 "금감원 무분별 정보공개 유감"

회계위반 땀 금감원에 행정소송
금융위, 17일 회계 위반여부 논의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감독원이 "민감한 사안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공개·노출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특히 회계위반 결정이 확정되면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양 측간 정면 충돌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8일 홈페이지에 "금감원에게 조치사건통지서를 전달받았으며 그에 대한 보안에 유의하라는 통보도 받아 언급을 자제해왔다"며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정보가 (금감원 취재를 통해) 무분별하게 공개·노출되는 현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진행 중인 감리절차와 관련해 지난 1일 금감원으로부터 조치사건통지서를 전달받았다. 또 보안에 유의하라는 내용도 함께 통보받

아 언급을 자제해왔다"며 "이런 가운데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결론 내렸거나 실제 통지서에 기재된 '조치 내용' 등이 확인절차 없이 금감원 취재 등을 바탕으로 기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감원이 조치사건통지서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전달하면서 보안을 지키라던 금감원이 정작 언론을 통해 외부에 공개한데 대한 유감 표명이다. 조치사건 통지란 금감원의 감리결과와 조치가 예상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안건 상정을 요청하기 전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 내용 등을 해당 회사에 안내하는 절차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2015년 종속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회계처리를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후 이 같은 내용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감사인 등에 통지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어 "외부전문가와 협의를 통

해 회계기준을 적용한 것일 뿐 분식회계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둘러싼 회계분식 논란의 최대 쟁점은 회계처리가 합당한지 여부다.

바이오로직스가 2011년 설립 이후 계속 적자를 내다가 상장 전체인 2015년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낸 것이 정상적 회계처리냐 아니냐는 것이다.

금감원은 중간에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한 것을 분식회계로 보고 있지만 삼성 측은 국제회계 기준에 맞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 여부를 논의할 감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감리위원회의 결론이 끝나면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된다.

분식회계로 규정한 금감원에 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으로 정해진 감리절차에 따라 입장을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혀 양측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간간해진 회계처리 희생양은 '스타트업'

>> 1면 '혼돈의 회계'서 계속

또 다른 회계사는 "IFRS는 원칙회계 중심이기 때문에 감사인의 판단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면서 "최근 차바이오텍,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에서 보듯이 회계처리가 각각의 해석에 따라 불법이 되고 합법이 되기도 하는 게 문제다"고 말했다.

기존없는 회계처리에 골머리를 앓는 기업은 중·벤처기업이다.

지난 3월 29일 안전회계법인은 삼광글라스 감사보고서에 한정 의견을 냈는데

이 회사는 4월 2일 거래가 재개되자 하한가로 직행했다.

지난 3월 22일 삼성회계법인도 차바이오텍 감사의견을 한정을 냈고 이튿날 차바이오텍은 하한가로 추락했다. 이날 이후 현재까지 차바이오텍의 시총은 약 800억원이 증발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회계법인의 감사 책임이 강조되면서 간간해진 회계처리의 희생양은 재무 관련 전문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스타트업이나 기술기업이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경제부문 가시적 성과 미흡, 갈길 멀어

>> 1면 '文 대통령 취임 1주년'서 계속

'일자리 대통령' 결맞는 성과 없어

중국 베이징대 김동길 한반도평화연구원 센터 교수는 "지난해만 해도 한반도 전쟁 위기가 돌 정도로 한반도 정세가 심각한 수준이었다"며 "불과 1년 만에 남북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핵심으로 하는 판문점 선언에 합의했다는 것은 외교사에서도 큰 의미가 있는 공적"이라고 극찬했다.

김 교수는 이어 "한반도 문제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의 역학관계가 구조적으로 변했다는 것"이라며 "예전 정권에서는 남북관계가 개선될 때 한미관계가 어긋나는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는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도 한미관계가 오히려 돈독해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개선 등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이같은 노력은 국민들의 높은 지지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4일 발표한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83%(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였다. 이는 취임한 달째였던 지난해 6월 첫째 주에 기록한 최고치(84%)보다 1%p 낮은 수치지만 임기를 5분의1 소화한 시점에서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다.

하지만 경제 부문에선 아직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경제성장률이 3%대로 회복되고는 있지만 '일자리 대통령'이라는 이름에 걸맞을 정도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해 실업자는 약 103만명,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9%로 현재 기준으로 측정한 2000년 이래 각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2월과 3월 취업자 수는 2개월 연속 10만 명대 증가에 그치고 있다. /김승호 기자